

“현행법상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어려워”

김윤덕 국토부장관 “감사하듯 조사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증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건설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법률 내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4일 또 다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작업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산업재해 주관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제재 수위) 의견을 제언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 건설면허 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실 시공에 따른 구조물의 손괴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한 산업재해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해석에 무게를 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근로자 5명 이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상 사망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건설사들의 경우 건설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실제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등록말소 처분은 지난 1994년 붕괴된 성수대교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에서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징

벌적인 제재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는데 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선 사고 건설현장의 안전 실태조사가 국토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동의한다”며 “사고 관련된 기업 관련해서는 상당히 깊게 조사하고 있는 단계이고 감사하듯이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 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살펴야 한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국가 피지컬AI 실증 거점 본격 도약

국가사업 예타 면제... 향후 5년간 1조원 투입

전주가 대한민국 ‘피지컬AI(Physical AI)’ 실증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국가전략사업인 피지컬AI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통과하면서, 향후 5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북 피지컬 AI 실증 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최종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은 국내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도시로서 테스트베드와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고, 기술·산업·도시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실제 물리 환경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술로, 산



업 자동화와 지능형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자동차·로봇·헬스케어 등 전략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 현 통일부장관 겸임)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개발 전략을 넘어 AI 기반 신산업 육성을 강조해 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에

서 총 382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민간 153억원)을 확보하며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싱가포르 현대자동차 클로벌혁신센터 벤치마킹과 현대차·네이버·리베리온·카이스트·성균관대·전북대 등과의 협력으로 1,170억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완성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을 확보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제 전북이 피지컬AI의 메카가 된다면, 곧 세계 속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는 한 세대가 6개월인 산업으로, 신속한 대응만이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예타 면제가 전북의 전략적 도약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촉매 역할을 맡게 됐다.

/이만호 기자

민주 신영대 의원, 행안부 특교세 48억원 확보



이번 특별교부세는 △군산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25억원) △고군산군도 해양레저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10억원) △월명산 전망대·유타 조성(7억원) △서래교 염수분사장치 설치(2억원) △대야면 철봉재 수리시설 개보수(4억원) 등 5개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

특히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전북 209호를 대체해 최신 설비를 갖춘 130톤급 선박을 새

로 건조하는 사업으로, 어민 안전과 해양질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고군산군도에는 CCTV, 재난방송시설, 인명구조함 등 안전 인프라를 보강해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월명산 정상에는 스카이라이프와 유타가 들어서 군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조성되며, 겨울철 사고가 잦은 서래교에는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돼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아울러 대야면 철봉재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농업용수 공급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해양·관광·안전·농업 등 군산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을지훈련

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18일 을지훈련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2025년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일 의장, 이만재 부의장, 최재기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차장, 최기호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훈련 상황을 보고 받고, 참여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박일 의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준비된 모습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인만큼 전시상황에 준하여 을지연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전북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성과 공개

“농업·재정·에너지로 전북 도약”

농업 정책 식량안보 전략 산업으로 전환

지방교부세·보조금을 조정으로 자치권 확대

새만금·에너지 고속도로 “지역 순환망”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 위원으로서 수행해 온 역할과 주요 과제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성과를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 위원으로서 수행해 온 역할과 주요 과제를 상세히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힘없이 뛰어왔다”며 “전북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 기본소득, “정부+지자체 협력과 민간 자율 운영 병행”

윤 의원은 먼저 농촌 기본소득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농촌 기본소득은 정부 지원과 지자체 협력으로 운영하는 축과, 민간이나 연구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농촌 기본소득 사업 사업은 100개소 단위로 진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규모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 정책, “식량안보 전략 산업으로 전환”

농업 정책과 관련해 윤 의원은 “농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밀, 콩, 조식료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명확히 세우고, 가격 안정과 생산 유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 콩 재배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이 밭작물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수요와 가격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콩 생산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거나 판로가 막히는 경우에는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반대로 필요한 전략 작물은 정부가 공격적으로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존 쌀 절약 작물 재배 인센티브 예산이 2,400억원 수준이었다면, 내년에는 4,000억원 이상 확보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며 “이제는 농업 지원을 포퓰리즘이 아닌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자율성, “교부세·보

조금 조정으로 자치권 확대”

윤 의원은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보조사업 매칭에만 얽매면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국세를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해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 비율을 기존 8대2 구조에서 7대3으로 지방 몫을 10%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교부세를 조정, 국비 보조를 개편, 균등 재정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방이 감당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결국 지자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며 “지역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1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에너지 고속도로, “수도권 송전 아닌 지역 순환망”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윤 의원은 “전북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수도권으로 전력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촘촘한 순환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중 일부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수도권 송전망으로만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북 안에서 에너지 자급을 우선 보장하고, 남는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구조”라며 “새만금에 조성된 화톳루 저장창고와 연계해 화톳루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AI·바이오 산업 등 미래 산업을 결합하면, 전북은 국가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 전북의 핵심 과제가 다수 반영됐다”며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은 그동안 국가 정책에서 소외받았지만, 이제는 당당히 균형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재정,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국회의원 즉각 제명·지방의회 비리 단죄해야”

전북 개헌운동본부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실현 전북 개헌운동본부 소속 회원 10여 명은 19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권성동·이준석 국회의원의 즉각 제명과 지방의회 의원 비리에 대한 철저 단죄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권력을 사임과 특권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온갖 비리와 추문, 특권 남용이 반복되지만 국회와 정당은 서로 감싸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일삼았고, 보좌관 휴대폰 사건에서는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단순 사퇴와 탈당으로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제명과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통일교 총재에게 근절을 올리고 1억 원 수의 의혹에 휘말린 사건과, 통일교 소유 골프장 출입 장면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직을 개인 권력 유지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여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실현 전북 개헌운동본부 소속 회원 100여명이 19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 비하 발언으로 인해 60만 명이 넘는 국민 청원이 제명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문제도 언급됐다. 전북도의회 및 시군 의회의 해의 연수 경비 부풀리기, 전원이 전주시원의 예산 몰아주기 사례 등 이해충돌과 사적 이익 추구가 반복되고 있으며, “정당 공천과 면책특권, 불투명한 특권 구조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와 지방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으로, 정치 개혁과 제도 혁신을 위한 개헌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특권 폐지, 모든 비리

의원 철저 수사, 제명 절차 즉시 진행 등을 요구해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몇몇 의원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의회의 신뢰 회복은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실현 전북 개헌운동본부는 “국회는 즉각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 모든 비리 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진행하라.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과 제도 혁신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